2026 국제금융포럼 요약정리

(본 자료는 2026 국제금융포럼 주요 발언 및 토론 내용을 정리한 참고자료임)

(2026.7.1. 해양금융센터)

1 '진정한 국제금융도시 부산'을 위한 제언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부산은 해양금융도시 전략을 유지하되, 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결제 실증도시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도시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의 재정립 필요

- ㅇ 부산은 '09년 이후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해양·파생 특화 금융도시를 지향해 옴
- ㅇ 기존 방식으로는 글로벌 금융도시(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와의 경쟁에 한계가 있어, 전통적 종합금융도시 모델이 아닌 해양금융 기반 특화 금융도시 전략 강화 필요
- ㅇ 부산의 기존 해양금융 전략에 디지털화폐 도시 전략을 추가해야 함

□ 해양금융도시의 핵심 조건

- ㅇ 항만, 글로벌 해운사, 금융, 해양 관련 산업 집적이 해양금융도시의 핵심 조건임
- ㅇ 함부르크 사례처럼, 항만과 하팍로이드 본사,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야 해양금융도시 성립
- ㅇ 부산은 항만 기반에 더해 글로벌 해운사 필요 → HMM 부산 이전은 해양금융도시의 핵심 과제

□ 홍콩 사례와 디지털금융 선점 경쟁

- ㅇ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위협받은 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경쟁력 회복
- ㅇ 홍콩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아시아 허브를 지향하는 반면, 부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중심 도시를 목표로 할 수 있음
- ㅇ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만큼, 부산이 선제적으로 특구 지위를 확보해야 함

□ AI 시대와 디지털화폐의 연계

- ㅇ AI 시대의 핵심 수익 영역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AI 솔루션, AI 결제, 디지털 통화,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확장될 것
- ㅇ 따라서 부산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나 이를 오히려 디지털화폐·디지털결제 도시 선점의 명분으로 활용해야 함
- ㅇ 향후 AI 경제가 디지털 결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도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3대 추진방향

ㅇ 입법 선점

-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 또는 특별법 제정 시 부산 특구 지정 필요
- 부산시의 선제적 법제화 논의 개입 필요

ㅇ 디지털금융 인프라 생태계 구축

-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관련 기관·기업·인재를 집적해야 함
- 금융·핀테크 기관(BNK, 토스 등)뿐 아니라 관련 인력(블록체인 기술자, 코인·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을 부산으로 모을 필요
- 부산에서 가장 먼저 규제 샌드박스 또는 실증사업 추진

ㅇ 시민 참여 및 교육

- 디지털화폐 도시 전략은 기관·기업 주도만으로는 어렵고, 부산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
-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도가 낮은 만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블록체인·디지털금융 교육을 확대해야 함

〈 향후 필요사항 〉

-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파악
- 부산 특구 조항 반영 가능성 검토
- BIFC·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실증사업 발굴
- HMM 부산 이전 및 해양금융 클러스터 전략과의 연계
- 시민 대상 디지털금융 교육·홍보 방안 마련

2 금융의 대전환, 생산적 금융으로 여는 대한민국 미래
-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

AI와 데이터는 금융의 본래 기능인 생산적 자본배분을 회복시키는 핵심 기반이며, 부산은 해양·항만·물류·제조업 기반 위에 AI·데이터·디지털자산·개방형 플랫폼 금융을 결합해 새로운 국제금융중심지 모델을 실험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금융의 생산적 기능 재인식 필요

- ㅇ 생산적 금융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한국 금융의 출발점
- ㅇ 산업화 시기 한국 금융은 국민 저축과 해외 조달 자금을 전략산업(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에 집중 배분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함
- ㅇ 당시 금융은 정부 주도 자본배분 성격이 강했으나, 자금이 생산적 용도(공장 건설, 설비 확충, 고용 창출, 산업 기반 형성 등)에 사용되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분명했음
- ㅇ 따라서 생산적 금융은 새로 도입해야 할 개념이라기보다, 한국 금융이 원래 수행해 왔던 자원배분 기능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회복하는 문제

□ 외환위기 이후 생산적 금융 약화

- ㅇ 금융 시스템 안정성은 크게 개선(금융기관 구조조정, BIS 자기자본비율 도입, 리스크 관리 강화 등)
- ㅇ 그러나 금융회사는 담보가 확실하고 표준화가 쉬우며 손실 가능성이 낮은 영역에 집중
- ㅇ 혁신기업, 성장 초기기업, 무형자산 기반 기업, 지역 신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로 이어짐

□ AI·데이터를 통한 생산적 금융 회복 가능성

- ㅇ 금융은 본질적으로 대출, 투자, 리스크,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정보산업
- ㅇ 기존 금융은 재무제표, 담보, 과거 거래이력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한계
- ㅇ AI와 데이터는 매출 흐름, 공급망 안정성, 수출입 패턴, 온라인 거래 데이터, 특허, 고객 유지율, 플랫폼 리뷰 등 대안 정보를 활용해 미래 현금흐름 예측을 정밀화할 수 있음
- ㅇ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생산적 금융은 판단 능력과 자본배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 AI가 금융의 판단 능력을 높일수록 자본은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혁신·생산성·지역 신산업으로 이동 가능

□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의 재정립 필요

- ㅇ 부산은 GFCI 기준 전 세계 120개 금융도시 중 23위, 핀테크지수 16위 기록
- ㅇ 전통 금융기관 유치 중심 전략만으로 뉴욕·런던·싱가포르·홍콩과 경쟁하기에는 한계
- ㅇ 기존 금융중심지를 모방하기보다, AI·데이터·디지털자산·개방형 플랫폼 금융이 실험되고 상용화되는 새로운 금융도시 모델을 지향해야 함

□ 부산 산업과 생산적 금융의 결합 방향

o 부산의 신성장 산업은 기존 담보대출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

- AI, 양자, 에너지, 전력반도체, 바이오헬스, 방사선 의과학,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등

o 이들 산업은 복합적 요소를 평가해야 하므로 AI 기반 금융평가가 필요

- 기술력, 데이터, 공급망, 특허, 전문인력, 의료·복지 데이터 등

o 항만·물류 산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

- 선박 입출항, 컨테이너 이동, 물류 지연, 운임, 환율, 보험,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 등

o AI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물류기업의 운영 효율성, 계약 안정성, 공급망 변화 대응력, 미래 현금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음

o 기계·조선기자재·부품소재 산업도 센서, AI, 디지털트윈, 공급망 데이터와 결합하면 생산성·품질·예측 유지보수 능력, 글로벌 수요 변화 대응력을 금융평가에 반영 가능

o 따라서 AI 시대의 생산적 금융은 부산의 신산업 육성뿐 아니라 항만·물류·기계·조선기자재 등 전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금융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부산형 국제금융중심지 4대 모델

o 해양·항만·물류 금융 데이터 허브

- 항만물류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연결
- 해운금융, 무역금융, 탄소금융의 평가·관리 체계 정교화
- 부산의 항만·물류 기반을 금융 데이터 인프라로 전환

o 디지털자산·실물자산 토큰화 실험지

- 항만 인프라, 선박금융,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 실증 추진
- 디지털자산과 실물자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자본조달 모델 모색
-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논의와 연계 가능

o AI 기반 지역 산업금융 플랫폼

- 중소기업, 스타트업, 전통 제조기업의 데이터를 결합
- 미래 현금흐름 기반 신용평가 체계 구축
- 담보 중심 금융에서 데이터 기반 산업금융으로 전환

o 아시아 연결 테스트베드

-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일본·중국·동남아와 연결
- 디지털 금융의 연결성을 활용한 아시아 해양도시형 실험 거점 구축
- 부산형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해외 확장 가능성 모색

〈 향후 필요사항 〉

-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기업금융, 개인금융, 리스크, IT, 준법 등 부서별 사일로 구조 해소
- AI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부서 소유물이 아니라 전사 자산으로 관리
- 금융 데이터와 의료, 통신, 유통, 물류, 에너지, 공공 데이터 등과의 연결 및 표준화
- 사전 허가와 세부 규정 중심에서 탈피하여 원칙 중심 규제와 학습형 샌드박스 수립
- 항만·물류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연결 및 지역 산업 데이터를 AI 신용평가와 연동
- 디지털자산·토큰화 금융을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 구축

3 해양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본 유입 방안 토론

해양금융은 장기·대규모·고위험 특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의 단독 참여가 제한적인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앵커 투자, 보증, 신디케이션, 후순위 보강 등이 필요함. 아울러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은 금융기관 집적 중심에서 벗어나 조선·해운·항만·수산 등 실물 해양산업 수요 창출과 연계되어야 하며, 원화 선박금융, RG 공급체계 개선, 조선공제조합 및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이 주요 실행과제로 제시됨

□ 박식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산업금융본부장

○ 글로벌 조선·해운은 경기순환성이 강한 산업임에도 현재 비교적 호황 국면에 있으며, 친환경 전환과 AI 기반 스마트 조선·스마트 해운이 동시에 진행되는 변환기에 있음

○ 부산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양금융 관련 정책금융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글로벌 해양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분기점에 있음

○ 해양금융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기대수익 대비 리스크가 크기 때문임

- 조선·해운은 경기순환성이 강한 산업
- 2010년대 중반 조선업 침체 이후 민간 시중은행은 조선·해운 금융에서 사실상 철수

○ ECA 금융의 핵심 역할은 민간 자본의 리스크를 완충하는 것임

- 무역보험공사는 정책금융기관이자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초장기·대규모 대출을 지원할 수 있음
- 정부 신용을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음
- 공동금융 또는 한시적 리스크 커버 구조를 통해 민간은행이 해양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민간금융 참여가 가능한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AI 기반 해운·항만 인프라 투자
- 스마트 조선 인프라 투자
-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건조 관련 야드 증설
- 한미 조선 협력 투자와 연계한 MRO 및 부가 설비투자
- 친환경·디지털 전환 관련 대규모 해양산업 투자

○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은 금융기관 유치보다 관련 기업 유치와 금융수요 창출에 집중해야 함

- 조선·해운·항만 특구 지정
- 법인세 감면을 넘어서는 파격적 세제 인센티브
- 장기 부지 임대 또는 무상임대
- 외국계 선사·금융기관이 실제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

□ 김태희 - 한국산업은행 해양산업금융본부장

o 부산은 SK해운, H라인해운, HMM 등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양수도 및 해양금융도시로 발전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음

o 산업은행은 민간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음

o 미시적 접근: 정책금융기관의 앵커 투자자 역할 강화

- 산업은행은 약 14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오션 쉬핑 펀드, 약 12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오션 인프라 펀드를 운용 중
- 정책금융기관이 앵커 투자자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면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프로젝트 총액의 일부를 산업은행이 우선 부담하고 나머지를 민간 금융기관이 매칭하는 신디케이션 구조를 활용
- 부산은행 등 지역금융기관과 공동 선순위 또는 선·후순위 리스크 분담 구조를 통해 협업 가능
- 전통적 선박금융을 넘어 자율운항 솔루션, 전기추진선, 해양 인프라 등 모험적 영역으로 투자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o 거시적 접근: 선박금융의 구조적 한계 극복 필요

- 과거 공모형 선박펀드는 경기 호황기에는 성공했으나, 경기 하강과 선사 부도 시 충격이 컸음
- 기존 공모형 투자구조는 경기 변동에 과도하게 종속되고 제도적으로 경직적이었음
- 싱가포르·유럽 등은 사모펀드·리스회사 중심의 보다 유연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선박금융도 인프라펀드형 위험분담 구조를 도입해 민간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해야 함

o 정책금융의 역할은 민간자본의 신용 안전판이자 구조화 설계자임

- 정책금융은 위험분담 구조를 설계하고, 민간 금융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산업은행이 선도적으로 신규 사업을 구조화하고 검증된 모델을 제시하면 민간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의 참여가 용이해질 수 있음

o 동남권투자공사 조속 설립 필요

- 단일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해양금융 생태계 확장에 한계가 있음
- 동남권투자공사가 강력한 앵커 투자자 역할을 하고, 산업은행이 구조화·설계를 담당하며, 해양진흥공사 등 기관의 투자·보증 기능을 결합하는 융합형 위험분담 체계가 필요함
- 북극항로, 글로벌 해양물류 재편 등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부산은 신속한 정책 실행체계를 갖춰야 함

□ 노해동 - BNK부산은행 해양금융·IB 그룹장

○ 부산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해양수도 부산에 부합하는 해양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조직 차원에서 해양금융 강화 의지를 명확히 함

- 기존 투자금융그룹을 해양·IB 그룹으로 개편
- 과거부터 선박금융팀, 해양금융부 등을 운영하며 민간 금융기관 중 드물게 해양금융 조직과 노하우를 유지
- 중앙동 금융센터를 해양금융종합센터로 개편하여 선박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금융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계획

○ 지역 중형조선사 RG 발급 확대

- 무역보험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강화
- RG 발급 잔액은 약 1조 1,600억원 수준
- 건조 리스크가 검증된 조선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

○ 국내 선박매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선박 에스크로 에이전트 업무를 도입함

- 국내 선사들이 선박매매 시 싱가포르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국내 은행권에서 에스크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은행이 선박 에스크로 에이전트 업무를 시작

○ 부산은행은 선박금융 외에도 항만·물류 인프라와 친환경 선박 분야로 투자영역을 확대 중

- 지역은행으로서 해상풍력 관련 국민성장펀드에 참여
-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지스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과 협력하여 항만·물류 인프라, 친환경 선박 관련 금융을 지원

○ 민간금융기관의 해양금융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선박은 바다 위 이동자산이므로 리스크 관리가 어려움
- 선박가치 변동성과 시장 변동성이 큼
- 선박금융·인프라금융은 1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장기 금융이어서 민간은행의 조달·운용 부담이 큼
- 정책금융기관의 앵커 역할, 보증 확대, 산업 정보 및 노하우 공유가 필요

□ 이동해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실장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지수 관리, 해외 홍보, 글로벌 금융도시 사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부산은 일반 금융중심지와 달리 해양산업이라는 실물 콘텐츠를 보유한 도시임

-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은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한 해양금융 특화 전략이어야 함

○ 해양금융 전략은 기존 각 분야별 파편화된 접근을 넘어 해양경제 거버넌스 아래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해양금융의 수요자는 조선, 해운, 항만뿐 아니라 수산과 관광까지 포함함
- 부산은 도시 단위로 볼 때 수산업 기반도 크므로, 해양금융 범위를 수산·어업 금융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원화 선박금융 제도화 제안

- 국내 선박금융은 주로 달러 금융으로 이루어져 민간은행의 조달 경쟁력이 정책금융기관이나 외국계 금융기관보다 낮음
- 일본은 엔화 금융을 적극 활용해 민간은행의 참여와 선화주 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 광탄선, LNG선 등 국내 전기·가스 요금과 연계되는 선박은 원화 금융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원화 금융은 국내 민간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금융 참여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

○ RG 공급 확대를 위한 조선공제조합 설립

- 부산·동남권 중소·중형조선소는 RG 발급난으로 수주와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5천 톤, 1만 5천 톤급 케미컬선, 예인선, 특수선, 어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RG 문제가 발생
- 조선공제조합은 법적으로 설립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있으므로, 정책금융기관과 지자체 기금 출연을 통해 RG 공급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해양금융과 디지털금융의 접목 필요

- 부산의 해양수도 전략은 디지털 금융 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 바다야구장 등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에 STO 등을 활용해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산이 디지털금융 도시로 주목받을 수 있음

□ 질의응답

Q.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음. 국가 정책금융기관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지? (박흥주 미래공유경제연구소장)

A. 김태희 한국산업은행 해양산업금융본부장 답변

- ㅇ 금융중심지의 핵심은 단순한 기관 소재지가 아니라 산업 기반과 금융수요에 있기에 금융기관을 부산에 모으는 방식만으로는 국제금융도시로의 실질적 전환이 어려움. 부산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떤 영역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함
- ㅇ 그동안 부산은 금융기관을 집적하는 방식으로 금융중심지 전략을 추진해 온 측면이 있으나 홍콩,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런던, 뉴욕 등 주요 금융도시는 단순히 기관이 모여서 성장한 것이 아닌, 역사적 배경과 산업 발전이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중심지로 발전함
- ㅇ 아일랜드가 항공기금융의 중심지가 된 배경은 과거 유럽과 미국을 오가던 항공기가 기술적 한계로 아일랜드에 기착하면서 항공 관련 산업과 금융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임. 이 사례처럼 금융중심지는 인위적 기관 이전보다 산업적 필요와 금융수요가 결합될 때 형성됨
- ㅇ 부산과 동남권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이 필요함. 특히, 부산·동남권의 해양산업, 북극항로, 항만물류, 조선·해운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전담 투자기구, 즉 동남권투자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중요
- ㅇ 북극항로 문제는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움직이는 거대한 지정학적 경쟁 구도와 연결되어 있음.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과 동남권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함. 정책 역량을 분산하기보다, 핵심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해 빠르게 실행하는 전략이 필요

4 지역특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

생산적 금융은 단순한 자금공급 확대가 아니라 부동산·담보 중심의 금융자원을 지역 생산현장과 산업전환 분야로 재배분하는 구조 전환 과제임. 이를 위해 기존의 담보·재무제표 중심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 공급망 내 위치, 경영자 역량, 지역 고용 기여도 등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금융평가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부산은 동남권의 조선해양·에너지·화학·우주항공 등 핵심산업과의 연계 및 신발산업 등 지역 전통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여 생산적 금융을 지역 핵심산업 고도화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실행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함

□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거시금융)

○ 현황 진단

-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부채는 GDP 대비 이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자금이 생산기반 확충보다 건설·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는 경향
- 전체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37.0%에서 27%대로 하락한 반면, 건설·부동산업군 비중은 22.7%에서 32.4%로 상승
- 기업대출 증가에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금공급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흐르지 못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임

○ 주요 발언

- 국내 금융은 그동안 안전자산·부동산 담보 중심으로 운용되었고, 혁신기업·미래산업·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음
- 생산적 금융은 첨단산업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전통산업, 뿌리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포괄해야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대규모 생산적 금융 공급이 단순 실적 경쟁이나 자금 살포로 흐를 경우 한계기업 연명, 은행 건전성 훼손, 특정 부문 쏠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책제언

-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혁신 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구조 전환 필요
- 혁신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금융규제 재조정, 모험자본 활용 확대, 회수시장 다변화가 병행되어야 함.
-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엄정한 사업성 심사, 정책금융기관의 투자원칙 확립, 지역투자의 정주여건 개선, 바젤Ⅲ 기반 리스크 관리가 필요

□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기업금융)

ㅇ 현황 진단

- 부산 중소기업 금융은 성장 신호와 경고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성장 측면에서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이 3조 원을 돌파하고, 보증서 이용 중소기업 수가 9.3만 곳에 달하며, BNK부산은행의 제조업 대출도 증가함
- 반면 보증사고 순증률은 전국 17개 지역신보 중 높은 수준이고, 대위변제액은 '22년 500억 원에서 '24년 2,007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함
- 보증과 자금을 단순 확대할 경우 부실도 함께 커질 수 있으며, 핵심은 공급량이 아닌 선별방법과 질임

ㅇ 구조적 한계

-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74%에 달하는 등 금융은 여전히 담보와 부동산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생산 비중이 47.5%이나 은행여신 비중은 34.8%에 그쳐, 지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금이 배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지역 중소기업이 본질적으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담보와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 체계에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지 않기 때문임

ㅇ 평가체계 전환 방향

- 신용판단시 비재무정보*의 제도적 반영이 필요
  * 기술력과 혁신 의지, 거래처 및 공급망 내 위치, 경영자의 신뢰성·역량, 지역 생태계 연결성 및 고용 기여
- 일본 관계형 금융 사례처럼 장기·반복 거래를 통해 축적되는 연성 정보를 활용하면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성장·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관계형 금융은 좀비 대출, 홀드업, 성과 발현 지연의 한계가 있으므로 출구 전략과 중장기 성과평가가 병행되어야 함

ㅇ 실행방안

- 부산형 관계형 금융 파일럿 추진 필요
  → BNK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참여
- 담보는 부족하나 기술력·거래처·경영자가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정보 기반 심사모델 시범 적용
- 위험분담 구조는 지역신보 부분보증, 부산시 이차보전, 지방펀드 공동투자, 민간 금융 참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음
- 성과평가는 보증·대출 규모가 아니라 담보 없는 신규차주 비중, 순수신용대출 비중, 민간자금 유인 배수, 3년 후 생존율·고용·R&D 증가 등 추가성 지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이민봉 크리스틴컴퍼니 대표**(스타트업기업)

○ 현황 진단

- 부산 신발산업은 과거 세계 신발 수출의 중심이었으나, 제조공정은 아날로그·파편화되어 있었고 디자인부터 양산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였음
- 공장별 견적, 품질, 납기 정보가 불투명하여 신규 브랜드와 자본이 유입되기 어려웠으며, 자본은 부동산·소비로 흐르는 반면 지역 생산부문의 디지털 전환 자금은 부족
- 생산적 금융의 본질은 자본을 다시 지역 생산부문으로 되돌리는 것

○ 크리스틴컴퍼니 사례

- 크리스틴컴퍼니는 AI 디자인 생성, 디지털 샘플 검토, 최적 공장 매칭, 양산·품질·납품을 연결하는 신발산업 Vertical AI 운영체계를 구축함
- 전통 제조업도 새로운 투자대상과 금융수요처가 될 수 있음
  → 부산 신발 제조 생태계에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 사례
- 제조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 데이터와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금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공장별 자금수요와 상환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지역경제 효과

- 정책금융이 지역 제조업으로 흐를 경우 제조 디지털화, 일자리·수출 확대, 투자매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 크리스틴컴퍼니는 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및 Series B 150억 원 조달, 청년 일자리 34명에서 48명으로 확대, 부산 교육연계 4개교에서 10개교로 확대 등의 결과 창출

○ 정책 제언

- 지역 제조 디지털전환 매칭펀드 조성
- 부산 AI 제조 특화 모펀드 조성을 통한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 BNK 등 지역은행의 핵심투자자(Anchor Limited Partner) 참여를 통한 민간자본 유입 유도
- R&D, DX, AI 인프라 자금 확대
- 산학연계로 청년인재가 지역 제조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 설계

□ 이광준 BNK금융지주 상무(지역금융)

o 현황 진단

- 기존 재무제표와 담보 중심 심사로는 지역 기업의 기술력, 성장 가능성, 공급망 내 대체 불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은행은 금융의 언어로 기업을 평가하지만, 기업은 기술력·성장성·산업 내 위치라는 산업의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양자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함

o 평가체계 혁신

- BNK금융그룹은 지역 주요 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퇴직 CEO, CTO, 기술명장 등을 중심으로 산업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임
- 산업자문단은 은행의 금융언어와 기업의 산업언어를 연결하는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며, 담보·재무 중심 여신심사를 기술·성장성·잠재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o 자본공급 실행체계

- 동남권 생산적 금융의 핵심 분야는 조선해양, 우주항공, 에너지, 화학 산업 등임
- 이들 산업은 탄소중립, 피지컬 AI, 무인기·도심항공교통, 에너지 전환 등 구조적 전환 수요를 보유하고 있어 전통적 은행대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 따라서 인내자본, 전환금융, 모험자본 형태의 과감한 자금공급이 필요함
- BNK금융그룹은 지역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 자회사들이 출자한 총 5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펀드를 출시하고, 두산에너빌리티·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앵커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o 성과지표 재정의

- 지역 생산적 금융의 성과는 단순 대출 규모나 집행률로 평가해서는 안 됨
- 향후 성과평가는 다음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① 시장실패 보완 및 금융 사각지대 해소 정도
  ② 정책·지역금융 자금의 민간자본과 모험자본 유인 정도
  ③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산업 구조 전환의 촉진 정도

□ 질의응답

Q1. 생산적 금융은 기존 금융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간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경우의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설계 방안은?
(김용기 좌장, 생산과포용 금융연구회 대표)

A.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답변

○ 혁신기업·벤처기업 발굴 및 평가는 그동안 은행의 주된 역할이 아니었고 주로 자본시장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생산적 금융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에도 혁신기업 평가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

○ 문제는 은행들이 혁신기업·벤처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가에 있음. 정부가 직접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전문가와 시장의 평가 기능이 투자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함. 생산적 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은행 내에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AI 전문가, 산업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등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함

○ 생산적 금융이 정권 차원의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장 내에서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며, 벤처·혁신기업에 특화된 평가시스템 구축이 은행과 자본시장 모두의 핵심 과제임

Q2. 관계형 금융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연성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자의적 판단이나 부실 여신을 정당화할 위험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김용기 좌장, 생산과포용 금융연구회 대표)

A.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답변

○ 관계형 금융이 자의적 판단이나 책임 회피로 흐를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해법은 대출 담당자에게 부실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데 있지 않음. 부실 책임이 담당자 개인의 낙인이 되는 순간, 담당자는 다시 담보 중심의 안전한 선택으로 돌아가게 되며, 생산적 금융의 문제의식은 원점으로 회귀하게 됨. 따라서 자의성 및 책임 회피 문제는 사후 페널티보다 제도 설계를 통해 예방해야 함

○ 제도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판단 근거를 남겨야 함. 어떤 비재무정보를 보고 왜 승인했는지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기록하게 해야 함. 자의성의 반대는 엄벌이 아니라 기록과 일관성임
- 둘째, 결정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야 함. 연성 정보 평가는 위원회 또는 동료 검토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개인의 자의성을 줄이고, 특정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도 완화할 수 있음
- 셋째,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물어야 함. 부실 발생 여부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당시 합당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판단했다면 결과가 부실이어도 면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결론적으로 관계형 금융은 담당자를 처벌하는 구조보다, 잘 선별한 담당자에게 보상을 주고 성실한 판단에 대해서는 실패하더라도 보호하는 신뢰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

Q3. 생산적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금융기관이 기존 방식과 달리 무엇을 평가해주기를 기대하는지?
(김용기 좌장, 생산과포용 금융연구회 대표)

A. 이민봉 크리스틴컴퍼니 대표 답변

○ 담보는 기업의 과거를 묻는 질문이고, 리텐션(User Retention) 등의 데이터는 미래를 묻는 질문임. 전통산업이 AI·디지털 전환과 결합해 성장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진짜 가치가 재무제표에 충분히 담기지 않음. 그러나 금융기관은 여전히 재무제표 중심으로 기업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과거 기준이 미래 산업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 추가 평가 필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데이터 자산의 깊이를 평가해야 함. 기업이 장기간 축적한 거래 데이터, 품질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 반복거래 데이터 등은 경쟁사가 단기간에 모방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자산임.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사업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음
- 둘째, 재주문율 및 반복거래 지속성을 평가해야 함. 특정 공장이 반복적으로 재주문을 받고 있다면, 이는 품질·납기·신뢰성이 시장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의미임. 토지나 건물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반복거래와 리텐션은 실질적인 사업 안정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음

Q4. BNK금융그룹이 발표한 산업자문단, 앵커기업 협약, 전략투자펀드 등 실행모델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
(김용기 좌장, 생산과포용 금융연구회 대표)

A. 이광준 BNK금융지주 상무 답변

○ 산업자문단, 앵커기업 협약, 전략투자펀드 등은 이미 최근 실행했거나 준비가 완료된 과제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임

○ 부산·동남권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전략산업 기업이 설비를 확대하고 공정을 고도화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성장 프로그램이 필요함

○ 지역 안에 성장 프로그램이 없다면 기업은 수도권 또는 외부 공공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성장 속도를 낮출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BNK는 지역 안에서 기업 성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 여신공급을 넘어 지역 산업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담당하는 역할로 볼 수 있음